

“공공건축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청서 1000여명 반대 집회
“건설현장 현실 이해하지 못하고
업계 갈등만 조장... 국민에 피해”
경기도의회에 즉각 중단 요구

“도민 안전 무시하는 분리발주조례 절대 반대!”, “편파적 조례 제정, 건교위는 각성하라!”, “부실시공 조장하는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하라!”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앞은 전국에서 모여든 1000여 명의 건설인들이 내는 함성소리로 가득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하용환 건설 경기도회장, 이덕인 건설 인천 시회장, 오인철 건설 강원도회장, 윤현우 건설 충북도회장, 김영구 건설 전남도회장, 최태진 건설 서울시회 부회장 등 전국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이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반대' 집회에서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에서 1000명이 넘는 건설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장현국 경기도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공공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해 난방, 공조시설 등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상정됐다가 10월에 표결 끝에 폐기된 조례안을 6개월 만에 재발의한 것이다.

하용환 건설 경기도회장은 “이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공사 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이기적인 조례”라며 “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의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유주현 건설 회장은 격려사에서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융복합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건설 생산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업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경기도의 분리발주 조례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회는 해당 조례안이 건설생산체계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을 일반화하는 등 법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마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에도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설품의 품질확보 어려움과 하자책임 불분명, 예산 낭비 등 결국 조례 제정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김주성 신동종합건설 대표는 “이 조례안은 종합건설업계의 밝그릇 문제가 아니라 하자책임 문제 등 국

민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조례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올라왔다는 김신(우)주산 이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기존 법률과 모순되는 조례안을 두 차례나 입법화하려는 시도에 분노한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강원과 충북도에서는 이 조례와 유사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연단에 오른 정동민 베틸건설 대표는 “의회가 말도 안 되는 조례안을 내놓고 건설업계에 갑(甲)질을 하고 있다”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며 업계 내 갈등만 부추기는 조례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 경기도청 정문에서 후문까지 행진하며 조례안 반대 구호를 외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키로 전격 결정했다. 김태형기자 kth@